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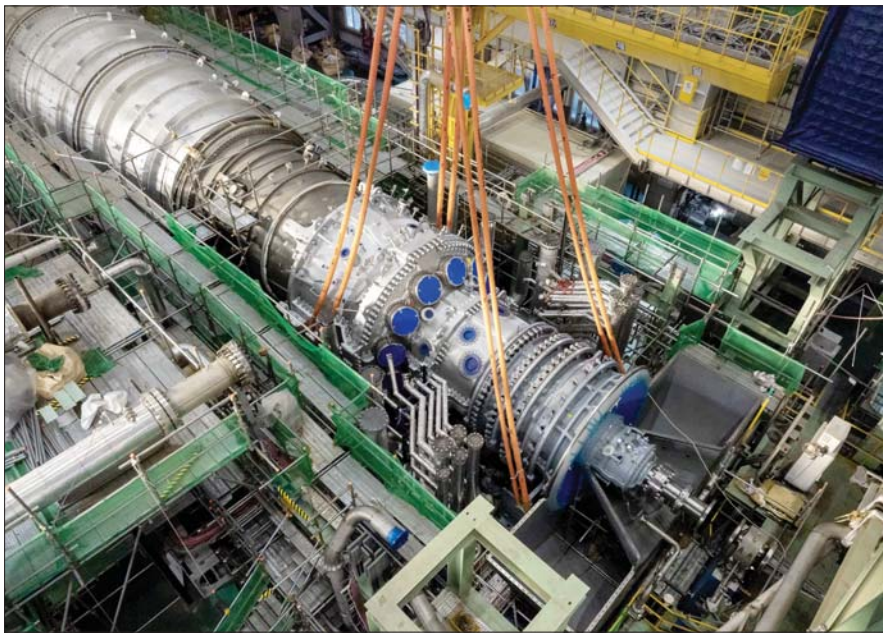
K-기업, 美 원전재건 ‘최전선’... “정부 정책지원 중요해져”

기술력·시공경험 기반 현지 진출
두산·현대 등 대규모 수주 성공
韓 정책 모호... “기회 놓칠 수도”

미국이 원전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형 원전 개발에 나서자, 국내 원전 기업들이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다수의 미국 빅테크 기업과 8기 이상 규모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사이 수주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난달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019년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 이후 첫 해외 수출 성과를 올렸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 업계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대형 원자력발전 사업의 기본설계(FEED)를 맡게 됐다. 현대건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개발하고 제작한 380MW급 가스터빈 제품.

/두산에너지빌리티

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미국 에너지 개발기업 페르미 아메리카(Fermi America)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부지 배치 계획,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대형 원전 건설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현대건설과 페르미 아메리카는 지난 7월부터 원자력 기반 하이브리드 에너지 기획을 포함해 기본설계 및 설계·구매·건설(EPC)에 이르는 협의를 지속해 왔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전 미국 에너

지부 장관 릭 페리(Rick Perry)와 토비 노이게바우어(Toby Neugebauer)가 공동 설립한 에너지 기업으로 차세대 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프로젝트 인허가를 검토 중이며 인허가 완료 후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출신의 마이클 쿤(Michael Koon)을 영입해 현지 네트워크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충과 노후 발전소 교체 수요가 겹치며 대형 원전 재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움직이는 것이 이상

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사별로 수출 라인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건설 인력은 우리보다 역량이 부족하고 제조 인프라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 일정 부분은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 현지에도 건설회사는 많지만 최근 원전을 실제로 지어본 곳이 거의 없어 한국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원전 분야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오랜 시공 경험에서 비롯됐지만 상대국이 기술력을 팔기 시작하면 빠르게 따라잡힐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재생에너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하면 산업 발전과 수출 측면에서 전략적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추진

(2018년 대비)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전체회의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력망 확충
‘국가기후예측시스템’ 본격 개발

우리나라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상 기후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10년 후 상황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00만 톤CO2eq) 대비 53%~61% 감축으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으로 고려한 목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안에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NDC 수립을

추진해 왔고,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국민 공개토론회(6회)와 11월 6일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책임 있으면서 실현 가능한 2030 목표를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우선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나간다.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제품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4.3%~31.0% 범위의 감축을 꾀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56.2% 감축을 추진한다. 또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추진해 60.2%~62.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탄녹위 회의에서는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일상이 돼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기준 1, 3개월 기후전망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청년층 취업난...’서 계속

10월 구인배수 0.42 외환위기 이후 최저

특히 내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2만 9000명 감소, 외국인인 1만 6000명 증가해 제조업 내 고용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

제조업 내부에서는 업종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의약품 제조업은 10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600명 증가,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도 각각 4100명, 2600명 늘었다. 반면 전기장비 제조업은 1500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증가폭도 점차 둔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역시 1만 7000명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줄었다. 종합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전월보다 다소 완화된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9만 명(-3.0%) 감소, 2022년 9월 이후 3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도 2만 2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 6000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다. 30대(+8만 명), 50대(+4만 3000명)도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의 구인과 구직활동 모두 위축됐다. 신규 구인인원은 14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000명(-19.2%) 감소, 제조업(-1만 8000명), 사업시설관리(-3000명), 도소매(-3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신규 구직인원은 33만 5000명으로 2만 4000명(-6.6%)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8000명)을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2로 전년동월(0.49)보다 하락, 1998년 외환위기 직후(0.19) 이후 역대 10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명절이 낀 달 기업과 구직자 모두 활동이 줄어드는 경향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5000명(-16.2%)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대한상의 “韓 산업정책, 고수익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주요 기업 수익성 20년만에 절반 감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국내 주요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기업의 재산성 약화가 투자·고용·혁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고수익 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00

대 기업의 총자산영업이익률(ROA)은 2004년 4.2%에서 올해 2.2%로 떨어졌다. 자산 1억원당 영업이익이 42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ROA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익성이 하락하면 설비투자·연구개발(R&D) 여력이 줄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늘면 정상기

업의 매출 증가율은 2.04%포인트,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포인트 하락한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초점이 혁신기업보다 한계기업의 연명에 맞춰지면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고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정책적 집중을 더하면 부가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중소 상장사 중 ROA 상위 100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약 5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 GDP의 0.24%에 해당하는 수치로, 0%대 저성장 국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기여분이라는 평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라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로 바꾸고,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